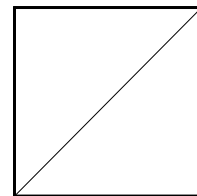


공 개



의안번호	제 102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2. 5. 31. (제 10 차)	

유안타증권(주)에 대한  
부문검사 결과 조치안

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

제 출 자	위 원 장 김 소 영
제출 연월일	2022. 5. 31.

## 1. 의결주문

유안타증권(주)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<별지>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유안타증권(주)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'특정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 관련 재산적 이익 수령'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 도과 전에 조치할 필요가 있어 다른 위규사항과 분리하여 먼저 조치하려는 것임

## 3. 주요골자

'특정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 관련 재산적 이익 수령'에 대하여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(이하 '자본시장법'이라 함) 제449조에 따라 유안타증권(주)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

## 4. 참고사항

가.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

나. 관계법규 : (붙임)

- 「자본시장법」 제71조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 제7호  
舊「자본시장법」(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) 제449조 제1항 제29호
- 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 제68조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 제5항 제14호  
舊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(대통령령 제28384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) 제390조  
(과태료의 부과기준), [별표22]
- 「금융투자업규정」 제4-20조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 제1항 제5호 아목

- 「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」 제20조(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) 제1항, 제3항, [별표3]
-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6조(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) 제1항, 제17조(과태료의 부과) 제1항, 제18조(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) 제1항
-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3조(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) 제1항 내지 제3항, 제5조(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)

#### 다. 관계부서 협의

- 제11차 제재심의위원회(2022.5.12.) 심의필

<별지>

유안타증권(주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.

- 다 음 -

## 1. 조치내용

### ☐ 기관에 대한 조치

○ 유안타증권(주) : 과태료 30백만원 부과\*

\*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「질서위반행위 규제법」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%를 감경

- 조치사유 : 특정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 관련 재산적 이익 수령

- 법적근거 : 「자본시장법」 제71조 제7호, 舊「자본시장법」 제449조 제1항 제29호, 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 제68조 제5항 제14호, 舊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 제390조, [별표22], 「금융투자업규정」 제4-20조 제1항 제5호 아목, 「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」 제20조 제1항, 제3항, [별표3]

## 2. 조치사유

### 가. 특정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 관련 재산적 이익 수령

☐ 투자중개업자는 투자권유와 관련하여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한 대가로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등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,

- 유안타증권(주)은 △△△\*가 자문\*\*한 ◇◇◇펀드, ◆◆◆펀드, □□□펀드(이하 “△△△ 자문펀드”) ○억원을 20xx.x.xx.~20xx.x.xx. 기간 중 판매한 대가로 △△△ 등 펀드 이해관계자\*\*\*로부터 회사 직원 ○명(판매 상위 직원 ○명, 본사 상품관리팀 직원 ○명)의 해외 연수(20xx.x.x.~20xx.x.xx.) 명목으로 국제항공권 비용, 호텔(골프리조트) 숙박비, 식비, 골프·투어 경비, 기념품 등 약 ○만원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음

\* ■■■이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PEF운용, 투자주선, 창업·M&A·경영 컨설팅 회사이며, ▽▽▽(20xx.xx월 설립, 20xx.x월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)이 동사의 펀드 관련 인력 및 업무를 승계

\*\* △△△는 △△△ 자문펀드의 판매금액에 연동하여 보수 수령(<예시> ◇◇◇펀드의 총보수 ○bp 중 ○bp 수령 조건)

\*\*\* △△△ 및 △△△ 자문펀드가 투자한 美 현지 재간접 펀드의 자문사(▼▼▼), 운용사(◁◁◁), 투자대상 플랫폼(◀◀◀)

(붙임)

## 관계 법규

### 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**제71조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**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.

7.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

### **제422조(임직원에 대한 조치) ① 생 략**

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직원이 제420조제1항 각 호(제6호를 제외한다)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금융투자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.

1. 면직
2. 6개월 이내의 정직
3. 감봉
4. 견책
5. 경고
6. 주의
7.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

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하여 관리·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게 대한 조치를 함께 하거나 이를 요구할 수 있다. 다만, 관리·감독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임직원의 관리·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.

### □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2017.4.18.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)

**제449조(과태료) ①**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29. 제71조(제7호에 한한다), 제85조(제8호에 한한다), 제98조제2항(제10호에 한한다) 또는 제108조(제9호에 한한다)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

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68조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 ⑤ 법 제71조제7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
- 14.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

□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(2017.10.17. 대통령령 제28384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)

제390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4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.

[별표22]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390조 관련)

2.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
터. 법 제71조(제7호에 한정한다), 제85조(제8호에 한정한다), 제98조제2항(제10호에 한정한다) 또는 제108조(제9호에 한정한다)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	법 제449조 제1항제29호	5,000만원

□ 금융투자업규정

제4-20조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 ① 영 제68조제5항제14호에서 "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
- 5. 투자권유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
  - 아.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한 대가로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등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

□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

**제20조(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)**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금융업 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등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.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<별표2> 과징금 부과기준 및 <별표3>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.

<별표3> 과태료부과기준

3. 예정금액의 산정

(‘17.10.19. 개정 前 기준)

위반결과* \ 동기	고의	과실
중대	법정최고금액의 100%	법정최고금액의 75%
보통	법정최고금액의 75%	법정최고금액의 50%
경미	법정최고금액의 50%	법정최고금액의 25%

- \* 중대 : 사회경제적 물의야기, 금융기관 또는 금융소비자 손실초래,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 저해  
 보통 : 중대,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
 경미 : 단순법규 위반 등

(‘17.10.19. 개정 後 기준)

위반결과* \ 동기**	상	중	하
중 대	법정최고금액의 100%	법정최고금액의 80%	법정최고금액의 60%
보 통	법정최고금액의 80%	법정최고금액의 60%	법정최고금액의 40%
경 미	법정최고금액의 60%	법정최고금액의 40%	법정최고금액의 20%

- \* 중대 :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·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·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  
 보통 : ‘중대’, ‘경미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
 경미 :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·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



- \*\* 상 :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, 동기,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 
 중 :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, 동기,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 
 하 :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
## □ 질서위반행위규제법

**제16조(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)**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,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

**제17조(과태료의 부과)**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(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.

**제18조(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)**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.

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.

**제19조(과태료 부과에 제척기간)**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(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)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.

## □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

**제3조(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)** ①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
1. 당사자의 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과 주소
2. 과태료 부과에 원인이 되는 사실,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
3.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
4.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

5. 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(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)
- ② 당사자는 제1항 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,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.
  -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른 의견이 구두로 제출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.

**제5조(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)**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	금융위원회	금융감독원
소관부서	자본시장과	금융투자검사국
연 락 처	02-2100-2653	02-3145-7015